

국민경제자문회의, 워싱턴 세미나서 "통일 대박"

워싱턴=윤정호 조선일보 특파원 ('14.5.10)

美 당국자들 원론적으로 공감... 개성공단 활성화 의견도 나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현정택 부의장은 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SAIS가 공동 주최한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의 출발점이 바로 통일을 '편익과 혜택'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내수 확대와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안전보장 쪽으로 눈을 떠야 한다"고 말했다.

안중범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은 북한의 국내총생산 규모를 남한의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통일이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유·무형의 편익을 고려하면 '대박'이 가능하다"며 '통일대박론'을 폈다. 그는 "대신 사회보장은 현금 지원 위주에서 서비스 위주로 줄여야 독일 같은 고비용 지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민간 펀드를 만들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 의원을 지낸 김창준 자문위원은 "남북이 통일되면 주변국이 그동안 쓰던 안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일정 기간 통일 지원에 사용하면 통일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통일대박론'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개성공단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미국 정부 당국자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통일대박론'에 원론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며 통일 논의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경제자문회의, 美조야에 '통일대박론' 전파

워싱턴=강의영 연합뉴스 특파원 (14.5.9)

통일 '부담·비용'보다 '혜택·편익' 집중 조명

美전문가들, 원칙적 찬성에 일부 속도조절론 제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SAIS와 공동으로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과제인 통일시대 대비와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지난 3월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 방안을 한·미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 측 주제 발표자 등은 종전 '부담·비용'에 주목했던 통일 및 남북 경제협력(경협)에 대한 관점을 '혜택·편익'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 남북 경제협치의 기대 효과, 통일의 편익 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현실성있는 방법은 남북 경제협치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남측이 개성공단 등 한정적 교역에도 이미 북측의 산업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치적 여건을 개선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대외 무역은 규모 면에서 경제 붕괴 이전인 1990년 수준을 회복한 뒤 증가하는 추세로, 체제 전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J-커브'를 그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제 회복이나 안정적 성장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것은 중국에 자원을 팔아 생필품을 수입하는 무역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통일 대박'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은 비용뿐 아니라 유·무형의 항구적 편익이 발생하므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통일 비용을 항목별로 미시적으로 추산해 정책 함의를 도출하고 다양한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 내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는 수익률 보장을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프로젝트파이낸스(PF) 활용이나 가칭 통일투자은행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부의장은 또 북한 주민의 70~90%가 우리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미리 각종 사회안전망 제도를 현금 급여 위주에서 직업훈련 등 서비스 제공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 국영·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에 관여한 롤랜드버거의 이석근 대표는 독일이 신탁관리청(THA)을 설립해 1만2천500개 동독 기업 중 66%를 1년 이내에 민영화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독일 신탁관리청이 어떤 원칙으로 기업을 분류·구조조정해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시나리오별 접근법에 따라 남북 간 산업 및 기업, 자원, 인구, 물류 등 인프라 병합이나 국가 위험도 저하 및 신용도 개선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형곤 KIEP 부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도모한다면 급진적인 경제 개혁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 간 경제 의존도가 높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충격이 컸지만, 북한은 이런 우려가 없고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과 투자가 뒤따르는 동시에 주변에 세계 최대 시장이 형성돼 있어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미국 정부 당국자와 한반도 전문가 등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비보도를 전제로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대체로 드레스덴 선언의 원칙 등에 동의하면서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북한 비핵화가 좀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 대박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거나 통일 논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